

환노위 반발...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적용' 무산되나

여야 반도체특별법 이견

국민의힘 '근로시간 특례' 삽입
"미국·일본도 비슷한 제도 시행"

민주당 "저녁 있는 삶 위한 정책
노동시간 확대 허용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 조항이 법안이 당초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가 고려돼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사 사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도 경영계 주장에 힘을 보탤다.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임금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 초과근무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사위원회도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간 서면합의로 휴가와 휴일, 연장·야

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민주당 원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고 조항을 따로 빼서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는 야당 중에서도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고 노동계의 압박도 거센 곳이라서 해당 조항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총 화합혁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시간이 문제라면 현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은 특별한 사정(▲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에 그쳤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삼성 '자사주 효과' 2500선 회복 했지만 밸류업·2000억 펀드에도 효과는 '미미'

위기의 코스피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자사주 효과'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발표했으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저조한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코스피는 3.49% 상승하면서 2500선을 회복했다. 특히 신저가를 경신하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4.67% 올랐다.

문제는 또 다른 증시 상승 동력으로 꼽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밸류업 지수의 상승 폭은 2.32%였으며, 지난 9월 30일 출시 이후 수익률은 -4.71%에 그친다. 이달 4일 밸류업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13개 상품이 상장하고, 지난 18일 거래소와 유관기관들이 밸류업 펀드에 2000억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못한 모습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밸류업 펀드 출시, 엔비디아 실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한 주간 코스피는 3.49% 상승했다"며 "그러나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는 삼성전자의 급반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심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8월부터 이달 22일



ChatGPT로 생성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관심' 이미지.

"지난주 코스피 상대적 강세는 이벤트·삼성전자 급반등 영향
투자자 전반적 투심 아직 부족"

까지 삼성전자를 약 18조4890억원 면에서 삼성전자의 신저가 경신을 주도했다. 이에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1년간 10조원(시가총액 대비 2.8%)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발표 직후였던 15일에는 7.21%, 18일에는 5.98%씩 급등하면서 다시 '5만전자'로 복귀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안내공시와 본 공시를 모두 포함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81개사에 그쳤다. 이날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2619곳(코스피·코스닥) 중 3.09% 수준이다.

이후 지난 18일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12월 6일까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대상으로 밸류업 지수의 연내 구성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리밸런싱이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변경에서는 특별 편입만 이뤄지며 편출은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이 결정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권 연구원은 "편출 없이 편입이 이뤄지는 경우, 지수 종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종목에 배정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함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업 지수 입장에서 투자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지수 선물 약정이 부진한 점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융위, 이번주 제4인행 가이드라인 공개

더존뱅크·소소뱅크 등 5곳 참여
'개인사업자 대출' 포용금융 포부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 중점 평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자리를 위한 '쟁탈전'이 이번주 막을 올린다. 제4인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을 차지하기 위해선 혁신 서비스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허들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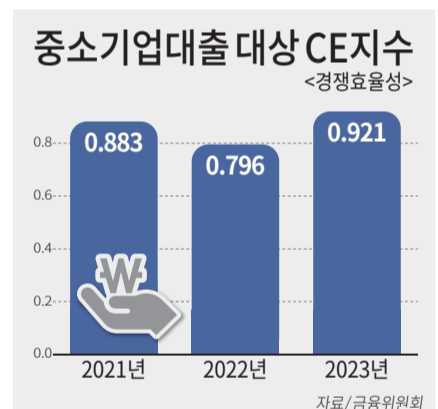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제4인행의 심사기준을 공개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5개 컨소시엄 '제4인행' 도전장

현재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드러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했다면 제4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는 포석이다.

더존뱅크는 전자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와 우리은행, 우리카드가 참여해 추진한다. 유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렌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의료업체 루닛, 자비스엔빌리즈(브랜드명 삼점삼), 트래블월렛, 현대대상, 현대백화점이 참여하고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연합했고, AMZ뱅크는 농업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한다.

◆'혁신+실현성' 예비인가 여부 판갈음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당시 은행법령상 인가 기준을 적용해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밖의 물적시설 ▲외국 금융회사,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 중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업계획은 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해외진출로 나뉜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 시 우선 자본금과 자본조달의 안정성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있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재무건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중 혁신성과 포용성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판갈음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유리 기자 yul115@